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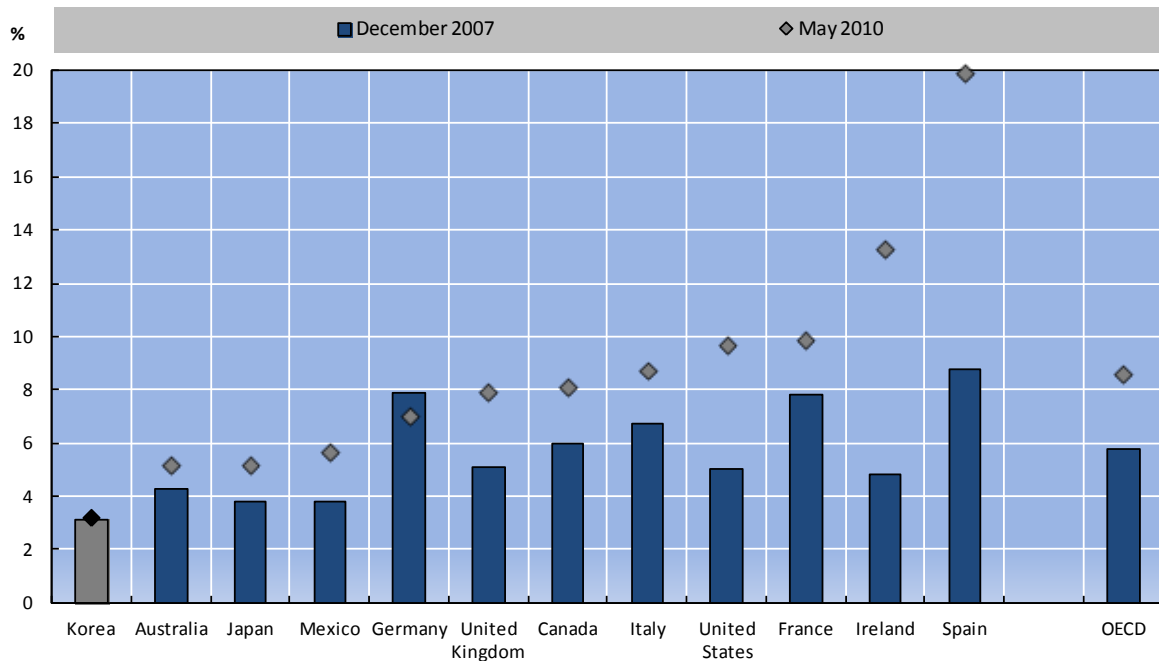


OECD 고용전망보고서 2010 -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여타 OECD 국가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경제회복기 동안 거의 위기 이전 상황의 수치로 회복하였다. 대한민국의 계절조정 실업률은 5월에 3.2%를 기록하여,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초기 단계인 2007년 12월의 3.1%에 근접하였다. 2010년 OECD 고용전망보고서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대부분의 여타 선진국에 비해 최근 위기상황에 매우 잘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2010년 5월 OECD 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8.6%로서 2007년 12월 저점(5.8%)보다 2.8% 포인트 상승하였다. 위기로 인한 근로자 실업은, 특히 아일랜드, 스페인, 미국 등에서 심각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림 1. 주요국의 2007년 12월 및 2010년 5월^a 실업률

OECD 국가의 노동력^b 대비 실업률 (백분율)



a) 그리스와 터키는 2009년 9월 수치; 영국은 2010년 2월; 노르웨이는 2010년 3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및 스위스는 2010년 1/4 분기 (OECD 계절조정실업률 통계는 이들 3개국에서는 월단위로 산정되지 않음).

b) 모든 통계자료는 계절조정 수치임.

자료: OECD 주요경제지표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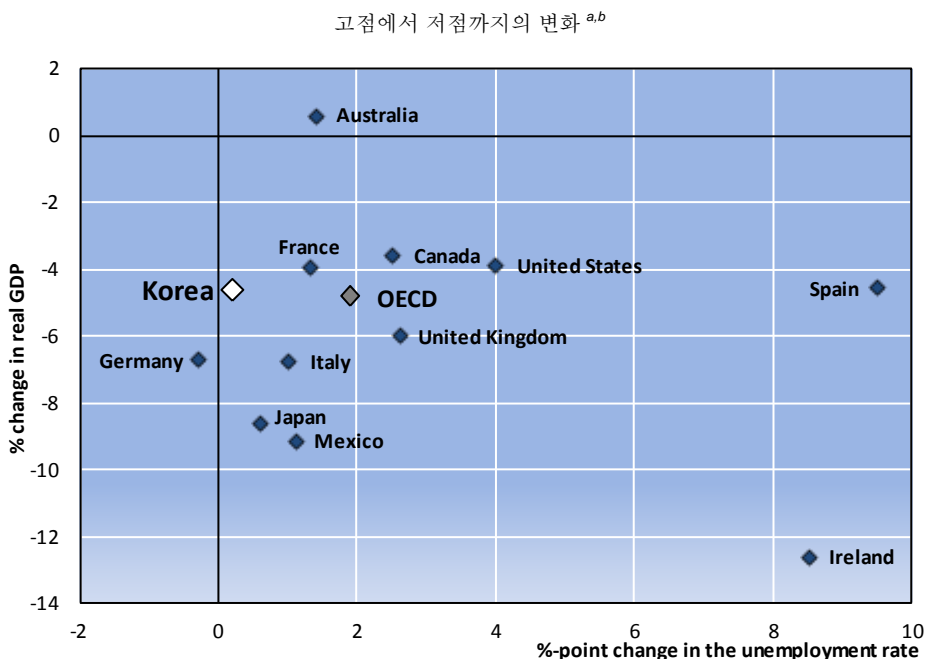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 가장 빠르고 강력한 경제회복을 달성한 나라의 하나로서, 이 같은 성과에는 무엇보다 수출의 급속한 반등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뒷받침 되었다. 2008년 하반기의 GDP 하락은 이미 2009년 상반기 들어 반등세로 돌아섰으며, 최근 기업신뢰도는 200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OECD는 2010년 대한민국의 생산(GDP) 증가율이 OECD 31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은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빠르고 강력한 경제회복은



일자리 상실을 막은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금년 1월 4.8%까지 이르렀던 실업률 급등 현상은 고용정책이 동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1월의 실업률 급등은 당시 희망근로의 일시 중단과 (희망근로가 재개된 이후인 3월 실업률은 3.8%로 급감), 신규졸업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근로계층은 청년층이었다. 학업 전념 청년을 제외한 15-29세 실업률은 2009년 7월에 8.5%에 이르렀으며, 2010년 2월에는 10%까지 치솟았다. 5월 들어 청년 실업률이 6.4%로 안정화 되기는 했으나 청년고용 (youth employment)은 여전히 정체 상태에 놓여 있으며, 청년 비경활인구의 증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에 청년인턴제를 다시 도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3만명의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 및 경력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는 당초 장기적 관점에서 비롯한 것이나, 경제침체에 청년실업문제를 완화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동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여자들을 정규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성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2,646명중 10,121명 전환). 그러나, 동 프로그램은 사중손실이 크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따라서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그 규모의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2. GDP 감소는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요소에 불과



a) 호주는 2008-9년간 경기침체를 겪지 않았으나, 2008년 3/4 분기에서 2009년 2/4 분기 동안의 비교를 위해 포함

b) 고점과 저점은 실제 시계열 GDP 레벨을 사용하여 결정

자료: OECD 주요 경제지표 통계자료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Database).

임금조정은 대한민국의 일자리 상실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2월 23일 체결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는 사회적 당사자 간 임금양보에 대한



보상으로서 고용유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확립하였다. 동 합의 자체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국한되었으나, 동 합의 이후 2010년 3월말까지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6,781 개소 중 2,118 개소에서 상호양보, 협력 협약이 체결되었다.

비록 이번 경제위기가 대부분의 여타 OECD 국가와는 달리,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일자리 상실자 등 실업자를 대상으로 소득보조 확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일자리 기회 및 직업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실업급여 지급 최장기간 및 포괄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전체 근로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2010년 3월 현재 전체 근로자 중 33.1%)을 감안한 조치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2009년 도입되었다. 참여자에 대해 최장 1년간의 통합적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의 한계지점에 위치해 있는 이들에게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의 55%가 취업에 성공), 2010년에는 2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ECD 고용전망보고서는 이같이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장기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락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및 여타 회원국에서 취하고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환영한다. 동시에, 노동시장이 회복되고 재정통합이 보다 시급해 지는 상황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OECD 국가중 가장 급속한 고령화와 동시에 최저 출산율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률을 증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OECD 고용전망보고서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특히 단시간근로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지한다. 동 고용전망보고서는 또한 단시간근로가 근로자의 장기 경력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전일제 및 단시간 근로 간 이동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OECD 2010 고용전망보고서는 비밀번호가 필요한 website에 접속하시거나 OECD 홍보과에 요구하실 경우 기자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 코멘트를 원하시는 기자분들은 OECD 고용분석정책과의 Stefano Scarpetta (tel: +33 1 45 24 19 88 or e-mail: stefano.scarpetta@oecd.org) 또는 정형우(Hyoung-Woo Chung; tel: +33 1 45 24 92 79 e-mail: hyoung-woo.chung@oecd.org)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